

중소 52% “日경제보복 무방비”...67% “1년 버틸 체력 없다”

중기중앙회, 日수입기업 300곳 실태조사...52% “아무 대책 없다”
 대책 있어도 ‘재고 확보’가 절반...‘완벽 대응책’ 세운 기업은 1%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아무런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량의 재고를 확보한 기업 10곳 중 6곳도 화이트리스트(수출입사우대국) 배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년 이내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 수입기업 10곳 중 7곳이 무방비로 경제보복을 당하거나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이 약해 단기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 52% “日 경제보복 대응책 全無”...완벽 대비 기업은 고작 1%

중기중앙회는 8월 5일-7일 일제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2%의 기업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일본 수입액이 연간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인 반

도체·화학·섬유·공작기계·자동차 부품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이다. 일본 경제보복에 철저히 준비한 기업은 10곳 중 1곳 수준이었다.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8%였지만 그중 ‘모든 대응책이 준비됐다’고 답한 기업은 1%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준비돼 있다’고 답한 기업은 8.6%에 그쳤다.

일본 수입기업 10곳 중 9곳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거나, 단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대책만 겨우 세워놓은 셈이다.

◇대책 있어도 46%는 ‘재고 확보’ 급급...67% “1년 내 피해 예상”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이 주로 ‘재고 확보’라는 소극적 방안에 불과했다. 당장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도 1년 내에 70%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영향이 나와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46.5%)는 대응책으로 ‘재고분 확보’를 꼽았다. 대(對)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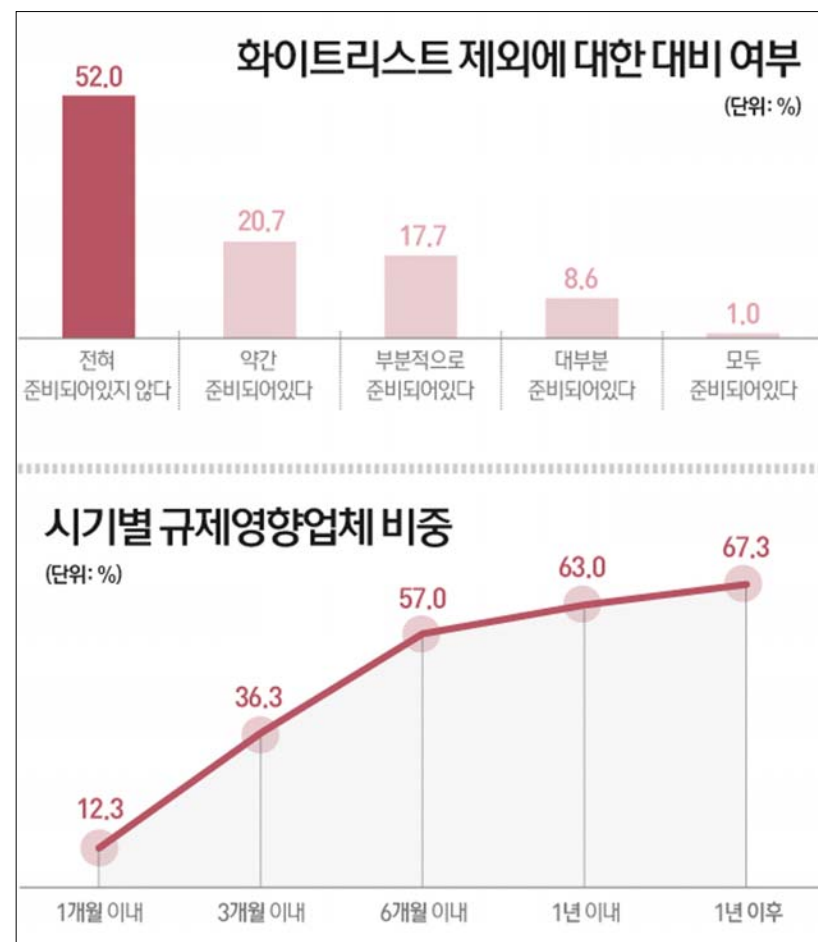
거래 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을 준비하는 기업은 31.3%였으며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선 기업은 15.3%에 그쳤다.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6.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일본 경제보복의 영향받지 않은 기업 중 67% 이상은 1년 내에 피해영역 안에 들게 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발효되면 3개월 내에 35.3%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1년 내에는 총 67.3%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입중소 6할, 日의존도 60% 이상...불매운동도 경영악화 초래

일본 수입기업들 10곳 중 6곳은 전체 수입액 중 6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수입길이 막히거나 줄어들 경우 줄어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수입 기업 중 60.6%는 지난해 총 수입액 대비 일본 수입액 비중이 60% 이상



으로 조사됐다. 수입액의 80~100%를 일본에서 창출하는 기업은 24.3%였으며 60% 이상 80% 미만은 일본에 의존하는 기업도 36.3%에 달해 가장 대비 일본 수입액 비중이 60% 이상

최근 사회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 ‘일본산 불매운동’도 국내 수입기업에게는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들은 영업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24.7%)을 꼽았다. 이어 △환율 영향 13% △수입 대체품 없음 11.7% △매출감소 10.4% △납기 지연 6.5%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교적 해결·국제공조 질실”...중기중앙회, 대·중소 상생에 속도

수입기업 44.7%는 정부에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에 힘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동조하는 기업은 21%에 그쳤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8월 중에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100대 품목을 포함해 전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매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아 많은 기술이 사장돼 왔다”며 “앞으로 우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대기업에 매칭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내 애마가 침수차?”...소비자 울린 중고차 업체 ‘꼼수’

#1. 최근 중고차를 장만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고차 딜러로부터 주행거리 5만7000km가 적힌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받았지만,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니 실제 주행거리는 4배 많은 21만8000km로였던 것이다.

#2. B씨도 6개월 전 들인 중고차를 애지중지 타다가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았다. 차량 비탁과 엔진룸에 토사가 나와 정비를 맡긴 결과, B씨의 차가 침수차라는 소견이 나온 것이다. B씨는 곧바로 중고차 업체에 항의했지만 매매업자는 ‘침수차가 아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중고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의 연식이나 하자를 교묘히 조작해 유통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돼 소비자 안

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고차의 상태나 성능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 중에서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으로 79.7%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인 572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주

주행거리 6만km라더니 실제로는 4배 많은 22만km 수도권에서만 80% 피해 발생...합의율은 ‘절반’

행거리 상이 25건(3.2%) △침수차량 미고지 24건(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지 않고 중고차를 팔아 세금폭탄을 떠안긴 사례가 34건(4.3%)이었으며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도 17건(2.1%)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 및 판매자 정보 △관인계약서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과 보상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 44곳 선정

“융자한도 상향·금리 우대, 판로 지원 등 혜택”

전남도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44곳을 선정, 13일 발표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은 3년 이상 전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기술성, 일자리창출 노력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선정된 기업은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따라 3년 동안 전남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2~5억) 및 우대금리(0.3~0.5%) 지원과 국내 개별박람회, 수출 분야 지원 사업 등 판로 지원사업에 우대 혜택을 받는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뽑힌 기업 가운데 지난 2014년 선정된 ㈜파루는 연평균 매출액 570억원을 달성해 2015년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성장했고, 2015년에 ㈜동양인더스트리는 1년 만에 매출이 37억원에서 56억원으로 뛰어오르는 등 여러 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기업 투자유치 만큼 중요한 것이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육성하는 일”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안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